

# 독도 주권선언... 한·일대치 고조

# '吳風' 조직력 삼켰다

盧대통령 초강경 대일담화

## “신사참배 등 日 도발 강력대응” 내달 EEZ 회담 지연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정부가 독도 도발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면 대응키로 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물리적 도발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일본의 강경 시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면적인 외교전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관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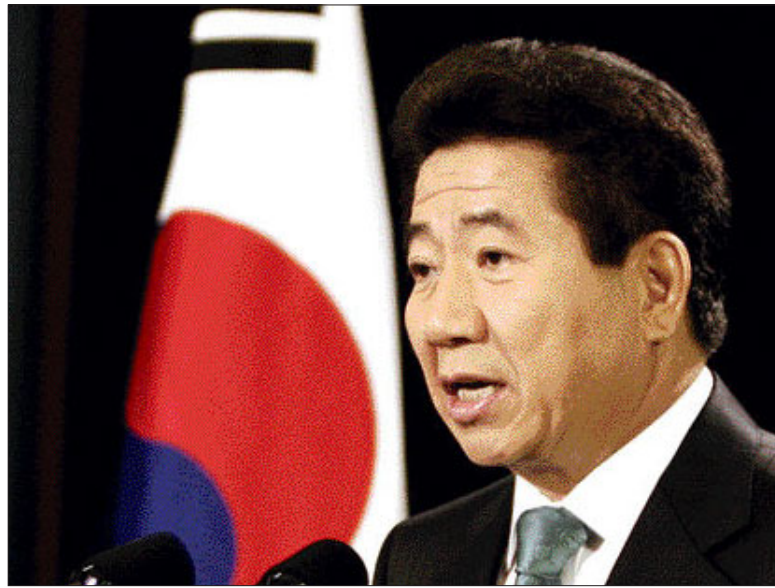
청와대 당국자는 “2차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대전

후에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해 강탈했던 땅을 슬며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시 돌려달라는 것으로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해 ‘국내용 메시지’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해 총리관저 출입기자들에게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일본이 대응수위를 낮추면서 즉각적인 충돌 위기는 초래되지 않고 있지만 독도 주변 해저지형에 대해 한국식 지명 등재가 추진될 경우 또 다시 갈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기술적 준비와 함께 해저지명 등록 및 통과에 대한 준비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탐사 추진으로 급속히 악화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야치 소타로(谷内正太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의 정당한 권리로 다시 조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저지명 변경 과정에서 일 본과의 동해상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되,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을 해오는 쪽이 일본이므로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이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21~22일 한일 외교차관 담판에서 합의된 '5

월중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에서 5월 말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고 언급하면서 “(EEZ 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협의의 재개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EEZ 협상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지 이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국내 일정과 연관시킨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전 후보 거세게 몰아친 ‘오풍(吳風: 오세훈 바람)’이 결국 터트려진 맹형규-홍준표 후보까지 안갯속 관세로 예측이 어려웠던 25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은 결국 ‘오세훈 스타탄생’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경선을 불과 17일 앞두고 경선 막자를 잡아탄 오 후보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꺾고 확실한 ‘대항마’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6개월 이상 경선에 대비해온 맹-홍 후보를 따돌리는 기염을 토했다. 오 후보의 승인으로서는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인기가 첫번째로 꼽힌다.

오 후보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은퇴를 선언해 일찌감치 ‘참신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한데다 정계은퇴 기간의 ‘신비주의’까지 더해져 경선 출마와 동시에 서울시장 ‘필승카드’로 바람을 일으켰다.

물론 오 후보는 경선 기간 맹-홍 두 후보에게 선점당한 ‘당심’을 뚫지 못해 악전고투했으나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당원·대의원중 30% 가량으로 추정되는 부동층 일부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두번의 대선패배라는 뼈아픈 교훈도 당원·대의원에게 “뭘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자”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차기대선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의원과 당원들도 어느 정도 오 후보의 ‘뒀심’을 밝혀주면서 여론조사가 주류표현인 오

후보의 승리를 도왔다. 지지이다. 당원·대의원 표가 맹-홍 후보로 분산된 것도 오 후보에게는 ‘어부지리’가 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선거연단 투표율이 다른 경선실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박 대표와 가까운 맹 후보, 이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홍 후보는 그동안 “박심(朴心), 이심(李心)이 내게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해 왔으나 정작 박 대표와 이 시장은 공정경선 관리를 이유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변호사 출신... 이미지 참신

오세훈은 누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45) 후보는 CF에 출연하고 TV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 스타 변호사다. 환할한 키와 잘 생긴 외모로 여성 팬이 많다.

16대 총선 때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17대 총선 약 3개월 전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 변호사로 돌아와 2년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오 후보는 불과 2주 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기는 무서운 ‘오풍(吳風)’을 일으키며 판세를 흔들었다.

오 후보는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환경 운동 변호사로 활약했다. 1994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몽구회장 선거를” 각계 검찰에 탄원서

## 문화도시 특별법 문광위 통과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극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5일 국회 문광위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위원들의 공조를 바탕으로 정족수를 확보함에 따라

상임위를 진행,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및 특별회계법안 등을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국회 법사위는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상임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는데다 문화중심도시 특별 회계 법안에 대한 이견도 있어 본회의의 상정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회장 불구속 수사 검토

검찰, 정의선 사장 구속영장청구 입장 정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려는 계획을 바꿔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사팀의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25일 현대차 계열사를 동원해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이날 중 결정키로 했으나 사정 변화가 생겨 이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각계 의견과 이번 수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방침을 바꿔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에 정의선 사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처벌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의 최대 수혜자인 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르면 26일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 변화는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은 물론 현대차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현대차 해외 판매량의 동요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

출 차질, 해외공장 건설을 비롯한 중장기 사업 공백의 장기화 등 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각계 우려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류 변화는 현대차 비리 수사의 당초 의도가 경영권 편법승계를 막는 데 있었던 만큼 정 사장을 구속하면 그 목적이 사실상 달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권 승계 비리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정 회장이 아닌 정 사장인 만큼 검찰이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상징적인 의미도 겹쳐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광대 광주시장,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 마형렬 광주상의 회장, 오관열 현대기아협력회 전라광역시 부회장 등 4명은 25일 정몽구 회장의 선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기아차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라도 정 회장을 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도 이날 정 회장의 선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06-2호

# (재)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임원(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6년 4월 26일

##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이사장

###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가. 모집분야: 원장(1명)

나. 자격기준

- 전남테크노파크 경영자로서의 경영마인드가 확고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교섭 능력을 갖춘 분
- (재)전남테크노파크계약직임용규정의 계약직임용자격기준 “가급”기준에 적합하며 만 62세 이하인 분
- (재)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11조 및 계약직임용규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2. 전형절차

가. 서류심사(1차):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면접심사(2차): 1차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4위까지 면접) (테크노파크 운영방안 발표 및 인터뷰)

\*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 3. 제출서류

가. 1차 전형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자필 이력서 1부
-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근무처별 각각 발급 첨부)
- 4)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5)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 7)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경력과 업적중심으로 기재하되 관련자료는 첨부)
- 8) 기타 자격증, 연구논문(최근 5년 이내) 등 서류·면접 전형에 도움이 되는 서류

나. 2차 전형 제출서류

- 1)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할 사업구상 및 운영방안 발표자료 1부(발표시간 15분)
- \* 1차 서류전형 결과 해당자에 한해 별도 통지

### 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접수처

가. 제출기간: '06. 5. 8. ~ '06. 5. 12. (5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운영국(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207호)

### 5. 채용형태 및 보수 수준

가. 채용형태: 3년간 계약직(성과평가 후 연장계약 가능)

나. 보 수: 연봉제(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

### 6. 기타사항

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 합니다.

라. 문 의 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 (061)749-4035, FAX (061)749-4038
- 주소: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207호

• 응시원서, TP조직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ntp.or.kr)